

우리는 북강원도로 간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제 북강원도로 가려고 합니다. 북강원도가 무슨 소리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새삼스럽지만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또 강원도민들께서도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잊고 사십니다. 강원도가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강원도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150만여명의 북강원도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강원도민과 거의 같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한다는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고 부산, 인천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항구였던 원산과 그 유명한 명사십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강원도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5일에 있었던 동해북부선 철도의 착공을 우리가 반기는 이유입니다. 이 철도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결과물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치른 뒤 평화 프로세스가 극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 남북 정

상들의 판문점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동해북부선 철도의 건설이 합의됐습니다.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20년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착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길이가 111km입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건설됩니다. 제진역은 바로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철도는 전체 동해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동해선은 부산전에서 출발하여 제진에 이르는 남한 동해안 전체의 철도 노선을 말합니다. 2027년이 되면 동해선 전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노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철도는 북한으로 연결됩니다. 북한에서도 역시 동해안의 철도를 동해선이라고 부릅니다. 남북이 서로 동해선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반쪽의 동해선인 것입니다. 북한의 동해선은 온전치 못합니다. 단지 속도가 늦습니다. 만약 한반도의 동해선 전체가 연결된다면 제진역을 출발해 금강산천년선을 거쳐 원산을 지나 두만강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3성 또는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철도 노선들은 물

리적으로는 이미 이어져 있습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우리가 북강원도의 동해선 철도를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 베를린에 도착한다면 그 거리가 1만1971km에 이릅니다. 차표 한장의 값은 올해 물가로 61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계로는 상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동해북부선의 착공인 것입니다. 이 철도가 완성되고 북한과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됩니다. 최고의 수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왕래하는 통로로서의 반도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장점을 남북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강원도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남강원도는 2024년에 강원 청소년 겨울올림픽을 개최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열리는 공식 올림픽입니다. 남강원도는 이 올림픽을 남북 강원도가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북강원도의 원산에 잘 조성된 마시령 스키장과 명사십리의 관광특구에서 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 강원도의 뱃길, 하늘길, 철길을 함께 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평창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신 소수자’의 인권은 어디로

손서정

평화·교육연구자

두 아이의 엄마, 매 끼니를 고민하며 일상의 평화를 꿈꾸는 사람. 대중 나의 정체성은 이렇다. 좀 더 내면적으로는 평화를 공부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감도 잘하고 다른 사람,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매우 교만하게도,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일은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일어났다. 접종 후, 2시간 만에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3일째 되던 날부터 어지러움이 심해졌다. 시선을 15도 각도로만 돌려도 나의 움직임을 따라오지 못하는 세상에서 부엌일은 전혀 할 수 없었기에, 벌써 한달 반 이상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던 강의를 지속하기 위해 모니터 한곳만 응시하며 수업을 했고, 초등학교 아이가 하교 후에 설거지를 했다. 그렇게라도 이어가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힘겨워도 아픔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 사람이 일상을 이어나간다고보다 오히려 일상이 사람에게 주는 힘을 깨닫게 했다.

누구나 자신의 일상을 살 권리가 있다. 문득,

한 지인에게 물었던 나의 오만하고 알았던 질문이 떠올랐다. 휠체어를 타는 그를 동네 산책에 초대했을 때다. 산책 후 식사 장소를 찾다 보니 주변에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아챘다. 간단한 김밥으로 마린한 피크닉에 오히려 기뻐하던 그에게 무심코 물었다. 언제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됐냐고.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무척 좋아하던 그는 갑자기 허리가 아팠고, 그 뒤로 걷지 못했단다. “아~ 달리는 기쁨을 알았을 텐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해맑은 얼굴의 대답, “뭘,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뭉개어 쿡 언어맞은 듯했다.

그런 거였다. 나도 지금 그렇다. 공감한다고 믿는 것과 그 실재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아프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돌봄만을 받는 의존체가 아닌,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일상을 살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의 지속이 필요하다. 힘드니까 빠져도 된다는 배제가 아닌 내려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소외된 소수자들을 급격히 제외시키고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서)를 획책하여 일상을 살기 위해, 일상을 아예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신을 맞아야 할까?

지난해, 포럼에서 쟁쟁 ‘37.5도라는 숫자가

‘신의 고지’처럼 되어 열리는 사람을 돌보면 우리가 열리는 이들을 내쫓는 세상에서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백신여권’에 대한 우려를 강요할 때만 해도 일년 만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세상을 맞이할 줄은 미처 몰랐다. 아무리 위기라지만, 인간 존엄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엎을 만큼의 변화가 빛의 속도로 다가올 줄이야.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다. 다시 우리가 비판하던 세상으로 복귀하는 데 만족할지, 더욱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2019년, 저명한 평화학자의 고향인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우리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국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보고, 정책에 순응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백신을 맞아도 건강하게 살아남는 사람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소수자가 될 수 있기에, 정부의 정책은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설치하고서야 시행돼야 한다. 방역패스를 못 받는 국민들만의 지하세계를 창출해서 또 다른 경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말이다.

함께 랍프를 구해주세요

신해현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414만1433마리. 2020년 실험에 쓰인 동물의 수이다.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실험동물 사용 실태에 따르면 실험동물은 대부분 백신과 같은 의약품 개발 등에 이용되었다.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안전성과 효용성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 확인을 위해 규제 시험을 필수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암울한 결과였다. 이제는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한 존재로 자리잡은 동물이다. 하지만 ‘실험 대상’으로서의 동물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물보호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021년 국제동물보호단체와 할리우드 감독, 배우가 만든 〈랍프를 구해줘〉(Save Ralph)라는 단편영화가 있다. 동물 실험에 투입된 후 한쪽 눈의 시력과 한쪽 귀의 청력을 잃은 토끼 랍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고, 에스엔에스(SNS)에서는 #SaveRalph(세이브랄프) 캠페인이 진행됐다. 그 영향으로 멕시코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북미에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 최초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다면 동물의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업과 소비자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의 행동은 기업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마케팅도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동물실험 등을 거쳐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거니즘 운동’을 비롯해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등 소비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비건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물

성 원료 대신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하는 화장품품을 말한다. 한 화장품 제조 기업은 2020년 6월 비건 친화 브랜드를 선보인 데 이어 2021년 2월에는 클린 뷰티 브랜드를 발표했다. 다른 화장품 브랜드는 2020년 6월 순수 당근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크림과 수분 패드, 수제 비누 등 3종으로 구성된 브랜드 최초의 비건 라인 제품을 출시했다. 이렇듯 사고의 전환 과정 속에서 기업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노력이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동물은 이미 인간 삶의 일부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물실험 금지지는 물론 동물의 복지를 내세운 ‘착한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나아가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동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변화를 꾸준히 이어나갈 때,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옴스큐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

‘점포정리’만 보고 지나치려는 순간, ‘소상공인 화이팅!’이라는 문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래 줄 서서 들어가던 식당의 대기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줄어든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가게가 하나둘 사라진 뒤 새로 채워지면 공공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요즘, 모두 안녕하십니까?

새해, 모두 안녕하길 바라는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제도 바뀌야

사회적 약자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박효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리테스 대표

2014년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노예 사건’ 피해 장애인들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한 뒤, 이듬해 공익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피해 장애인들은 패소하였고, 이후 소송비용 확정 재판에서 신안군청은 자신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피해 장애인들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법원 결정을 얻어냈다.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혼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소송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소송이었다. 이 밖에도 그동안 90년대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호주제 위헌소송, 장애인 보험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공익소송이 있었고, 이들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새해 들어서도 행정법원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학부모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이 소송은 최종 승패를 떠나 방역이라는 공익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조율하고, 우리 사회가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적잖은 소송비용 부담을 떠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 원칙(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을 유지해오다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정과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 낭비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위 염전노예 사건처럼 지자체나 국가에 대해 부담함을 호소하는 소송, 보험계약자들이 제기하는 보험금 소송,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이 제기하는 의료소송, 다수의 환경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환경소송 등은 남소로 보기 어려운 소송인데도, 우리 법제는 일률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강제함으로써, 순기능을 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집단, 기업, 국가나 지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만큼 가난하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나 대기업이 혼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참고 지내라는 것이다.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 원칙은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모방한 일본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각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고 미국도 그렇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면서도 변호사 보수 법정화, 법률보험, 보호적 비용명령, 각자 부담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거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다.

무릇 소송촉진법이 만들어진 1981년 무렵의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의 독재정치가 이루어진 시대였다. 당시 일부 대기업들은 이들 군사정권과 함께 성장했다. 군사정부나 대기업으로서는 소송을 통한 일반 시민의 문제제기를 제한하고자 했을 테고, 이에 나타난 도구적 개념이 ‘납소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구호였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진 것도 군사정부 시기였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원리이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개별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법치국가의 초석이다. 억울한 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한다면, 개별 기본권은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순기능을 하여온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 증명의 부담이 큰 전문가 소송 등에서 납소 방지 목적보다 더 중요한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